

## IMF이후 장기 실업자의 실태와 정책대안

김 교 성\* · 류 만 희\*\*

### I. 서 론

IMF 이후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고실업'시대로 진입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완전고용에 가깝던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1997년 11월 이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 대량 실업'이라는 경제적 공황(panic)을 경험하고 있다. 대량실업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실업의 양적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실업의 질적 상황의 측정지표라 할 수 있는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어(노동부, 2000), '장기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 실업문제는 크게 다수의 노동자가 단기간의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와 소수의 노동자가 장기간 동안 실업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장기실업 문제는 실업률이 낮을 지라도 실업자 개인의 효용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김대일, 1999). 또한 실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실업자들의 실업이탈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소득불평 등의 심화, 국민적 부담의 가중, 그리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결과하게 된다(신동균, 1999).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1) 최근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99년 2월 8.6%를 정점으로 감소를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9년 11월 현재 4.4%이다.

그러나 최근 실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나 학계의 연구경향을 보면, 이러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논의나 학문적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F 이후 장기실업자들의 실태를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와 같은 장기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업장기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정책적 경험과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장기실업 요인 : 실업탈출률(hazard rate)과 기간종속성(duration-dependence)

장기실업자들은 근로의욕상실 문제와 고용주의 채용기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Jackman & Layard(1990)는 장기실업자의 실업이탈률이 낮은 이유가 고용주들이 실업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실업자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용기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장기실업자의 이질성, heterogeneity). 다시 말하면,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잠재적 고용주는 실업자들을 더욱 저평가하여, 실업탈출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Blanchard & Diamond(1994)의 순위모델(ranking model)에 따르면, 기업은 실업기간이 짧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모든 노동자가 동질적이라 할지라도, 장기실업은 인적자본의 손실의 원인이 되고, 그러한 장기실업자는 사후에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유럽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장기실업을 설명하는 주요한 논거이며, 경제주기와 상관없이 실업자의 행태에서 일관되게 관측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장기실업자에 대해 최초 6개월 동안 장기실업자의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 채용에 기업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손실 정도가 크기 때문에(기간의존성, state-dependence, duration-dependence) 실업이탈의 개인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실업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주장되는 기술상실은 인적자본 손실이다. Lockwood(1991)는 기간의존성이 정보의 sorting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즉 노동자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는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간의존성은

노동자들의 이질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Pissaridse(1992)는 장기실업자가 자신의 기술이 손실되고, 이러한 기술손실의 정도는 고용창출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손실 정도는 실업의 지속성에 기인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 창출률의 문제이다. 그의 연구결과는 실업이탈율은 고용 창출력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의 모델에서 기간의존성은 장기실업자의 기술손실정도와 관계없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Diamond(1994)는 사용자들이 단기실업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 이유는 다양지만, 고용주는 단지 단기실업자의 채용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실업발생률(unemployment incidence)과 이들이 실업상태에 잔존하는 실업기간(unemployment duration)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Arrow(1973)과 Phelps(1972)는 노동자의 생산성은 완벽하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 특성에 대한 예상추정으로 생산성(인적자본가치)을 결정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Acemoglu, 1995, 재인용). 이러한 예상 추정치는 실업자 집단간의 균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엄격한 의미에서 기간의존성으로 실업집단을 고용과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국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신동균(1999)은 성별로 보면 남성 장기실업률이 여성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높아지는 기대임금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외국에서와 달리 청소년들이나 고령자의 장기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sup>2)</sup>, 25~59세까지 핵심 연령층의 장기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1999년 장기실업률은 12개월 기준으로 7.6%, 6개월을 기준으로 27.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일(1999)은 1990년대 우리나라의 실업장기화 추세는 노동공급에 있어서 경제활동성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반영과 함께 저학력 및 장년층 인구를 중심으로 취업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수요적인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로서 이해하고 있다. 구직기간을 통해서 실업기간을 분석한 한국노동연구원(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 저학력보다는 고학력 집단에서 그리고 주변연령층보다는 핵심연령층에서 구직활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인적자본론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적자본가치가 높은 실업자들의 기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직장탐색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그 결과 구직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2) OECD 국가에서 장기실업자는 45~64세의 상대적 장년층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1998).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장기실업의 요인은 장기실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의 문제', 즉 기간의존성과 잔존 실업자의 이질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실업자의 경우 고용창출률이 증가할지라도 앞서 언급한 이중의 문제로 인하여 실업이탈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2. 거시적 요인

장기실업의 거시적 요인은 경제구조의 경직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여기서 경직적 경제구조는 첫째, 상품시장에서 경쟁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시장수요의 변화가 노동수요의 변화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고용창출이 제한되고, 그 결과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진보가 매우 급속하여 노동수요도 급히 변화하는 데, 인력개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노동력이 수요가 증가하는 노동력으로 신속히 변환되지 못함으로써 구직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셋째, 고용조정이 매우 경직되어 고용창출이 제한되는 경우를 상징할 수 있다(김대일, 1999).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장기실업의 문제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기실업의 대상자는 저숙련, 고연령의 특성을 보이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특성상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실업자가 된다. Higgins(1994)는 최근 실업문제가 경기회복이 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다양한 구조적 원인으로 실업상태에 남아 있으며, 더욱이 많은 산업국가들에서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장기실업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Haveman, 1998, 재인용).

장기실업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에서 접근은 Haveman(1998)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감소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를 촉진하고,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서 피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수준의 하락효과와 장기계약관계에 기반하는 사회적 급여를 제거하게되므로 노동수요 부족에 따른 장기실업은 고용불안정문제와 사회적 보호 체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량실업 발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구조의 구조적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변화를 통한 장기실업문제의 해소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중의 문제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때문에 거시경제의 긍정적 변화 결과를 노동공급 측면에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 : 고용중심적 사회정책

장기실업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보면, 장기실업자가 경험하는 이중문제, 즉 잠재적 고용주의 채용기피와 그 이유가 되는 실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기술손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장기실업의 주요한 대책으로써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기실업자들이 실업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을 유지하는가가 재취업의 관건이 된다. Acemoglu(1995)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처방은 기간의존성이 기반하고 있는 엄밀한 메카니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 받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균형은 차별 없는 균형에 의해 파레토 지배적인(pareto-dominated)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고용보조금 지급(subsidy),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olicy) 등의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고용보조금 지급(subsidy) 정책은 장기실업자의 기술수준의 균형을 개선시키지 못하여 장기실업자의 실업이탈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차별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장기실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Acemoglu는 정부의 긍정적 차별정책은 장기실업자의 기술균형을 개선시켜 장기실업정책으로써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과도한 긍정적 차별정책은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술수준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수준을 민간기업보다 낮게 하여 모든 장기실업자를 채용한다면, 장기실업자가 자신들의 기술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므로 반생산적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긍정적 차별 정책을 민간기업에서는 시행한다면 발생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긍정적 차별 정책은 장기실업자의 기술균형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은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교육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노동시장정책은 그 효과가 복합적이다. 재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장기실업자의 기술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교육훈련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수준을 유지하려는 유인력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장기실업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방안은 정부가 권장하는 긍정적 차별정책이 장기실업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동균(1999)은 장기실업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방안이라 할 수 있는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창출정책은 일반적으로 실업자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책은 사후 치유책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실업자를 구제하는 가운데 장기실업자 혹은 장기실업예정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실업자에 대한 공공부문 수용창출정책과 민간부문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장기실업자에 대한 profiling 도입, 교육훈련, 자영업 창업지원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장기실업자에 대한 효과적 처방 정책으로 거시경제 부양을 통한 고용창출은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장기실업자의 이중문제)로 인하여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중심적 사회정책 방안은 긍정적 차별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I. 우리 나라 장기실업자의 실태와 특성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data)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주관 하에 한겨레신문사의 한겨레 노동교육연구소에서 1999년 7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실업자 실태조사'에 기초한다. 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서울시 4개 구(도봉, 동대문, 관악, 구로), 89개 동의 거주자 중 1997년 11월 이후 실업하고 1999년 7월 현재 구직 등록된 실업자이다. 따라서 주요 연구대상인 장기실업자는 최대 실업기간이 22개월을 넘지 못한다. 연구의 표본이 되는 사례들은 총 1,468명이며, 그 중 분석의 주요 대상인 장기실업자는 1,029명이다.

#### 2.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과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변수들은 크게 종속변수,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이전직장의 특성 변수, 고용관련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변수로 나눌 수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실업기간	1997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의 실업기간(월)
	재취업여부	재취업=1; 미취업 실업상태=2
개인사회 경제변수	성별	남성=1; 여성=2
	연령	실제 연령(년)
	교육년수	실제 교육년수(년)
	가구주여부	가구주=1; 비가구주=2
	가구원수	실제 가구원수(명)
	최근소득	실직전 이전직장에서 수령하던 월 임금액(만원)
	최근근속년수	실직전 이전직장에서의 근속년수(월)
이전직장 관련변수	최근직종	실직전 이전직장의 직종; 전문관리직(공무원, 관리자, 전문가)=1; 사무직=2; 서비스직=3; 기계·조립직=4; 단순노무직=5; 기타=6
	최근업종	실직전 이전직장의 업종; 1차산업=1; 제조업=2; 건설·전기업=3; 서비스업=4; 금융·보험업=5; 기타 공공사회업과 공무원=6
	최근직장규모	실직전 이전직장의 종업원 수; 1인~4인=1; 5인~9인=2; 10인~29인=3; 30인~99인=4; 100인이상=5
	최근근무형태	실직전 이전직장의 근무형태; 정규직=1; 임시직=2; 일용직=3; 자영업=4
	이직사유	실직사유; 파산·폐업=1; 정리해고=2; 일감부족=3; 퇴직 등 기타=4; 개인사유=5
고용제도 관련변수	고용보험가입여부	가입=1; 미가입=2; 모름=3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임=1; 미참여=2
	직업훈련경험여부	경험하였거나 경험중임=1; 경험없음=2
	법정퇴직금수령여부	수령=1; 미수령=2
기 타	의중임금	실제 의중임금액(만원)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생존분석이다. 우선 장기실업자의 특성은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단기실업자의 특성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장기 실업자의 실업상태로부터의 탈피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생존표 분석(life table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재취업율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해 모수적 생존모델(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현황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연구대상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의 총 대상자 1,468명 중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수는 1,029(70.1%)명이며, 실업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실업자는 439(29.9%)명이다. 장기실업자 가운데 재취업한 사람은 164명(15.9%)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실업자 중 재취업자(340명, 23.2%)나 단기실업자 중 재취업자(176명, 40.1%)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로서 장기실업자가 단기실업자에 비해 재취업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장·단기실업자의 재취업 현황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합 계
재취업자	176(40.1)	164(15.9)	340(23.2)
실업자	263(59.9)	865(84.1)	1,128(76.8)
합 계	439(100.0)	1,029(100.0)	1,468(100.0)

chi-square  $p < 0.001$

#### 5. 장기실업자의 일반적 특성

장기실업자에 대한 특성은 재취업자를 제외한 장·단기실업자간의 단순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3>는 장·단기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시된 통계량(%)은 변수별 속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변수별로 빈도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 수(missing)가 변수마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실업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실업자(59.7%)가 여성실업자(40.3%)에 비해 많으나, 장기실업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 실업자가(62.4%)이고, 여성실업자(39.6%)인 반면에, 단기실업자에서는 남성(50.6%)이고, 여성(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가 남성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성 실업자를 중심으로 실업의 장기화 경향은 국내, 외 연구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존임금이 높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경우 실업이 장기화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남성에 비교하여 비정규직 고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장·단기실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남성	133	50.6	540	62.4	673	59.7
	여성	130	49.4	325	39.6	455	40.3
주소득원***	주소득원임	149	56.9	625	72.7	774	69.0
	주소득원 아님	113	43.1	235	27.3	348	31.0
연령***	20세-29세	65	24.7	86	9.9	151	13.4
	30세-39세	62	23.6	174	20.1	236	20.9
	40세-49세	61	23.2	182	21.0	243	21.5
	50세-55세	25	9.5	143	16.5	168	14.9
	56세 이상	50	19.0	280	32.4	330	29.3
평균연령***		41.19		47.15		44.17	
교육수준**	무학	9	3.4	26	3.0	35	3.1
	초등졸	34	13.0	191	22.2	225	20.0
	중등졸	54	20.6	163	18.9	217	19.3
	고등졸	100	38.2	309	35.8	409	36.4
	전문대졸	24	9.2	38	4.4	62	5.5
	대학졸 이상	41	15.6	135	15.7	176	15.7
평균교육년수		10.76		10.30		10.53	
최근입금*	69만원이하	78	30.6	200	23.4	278	25.1
	70만원-99만원	78	30.6	226	26.5	304	27.4
	100만원-149만원	57	22.4	247	28.9	304	27.4
	원	42	16.5	181	21.2	223	20.1
	150만원이상						
평균최근입금*		96.42		105.64		101.03	
최근직종***	전문관리직	26	9.9	132	15.3	158	14.0
	사무직	45	17.1	113	13.1	158	14.0
	서비스직	70	26.6	140	16.2	210	18.7
	기계·조립직	37	14.1	155	18.0	192	17.1
	단순노무직	66	25.1	279	32.4	345	30.7
	기타	19	7.2	73	5.0	62	5.5

chi-square, t-test: \*\*\* p < 0.001, \*\* p < 0.01, \* p < 0.05

전체 실업자의 연령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장기실업자의 경우 56세 이상 장년층의 비율(32.4%)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평균연령도 단기실업자(41.1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기실업자(47.15)의 장년층화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36.4%), 초등학교 졸업자(20.0%), 대학이상 졸업자(15.7%) 등의 순을 보이며, 장기실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35.8%), 단기실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38.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장기실업자의 고학력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실업자의 고학력 경향성은 서구 유럽국가의 장기실업자의 특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고학력 경향은 실업상태에서 기대하는 의중임금수준이 저학력자 보다 고학력자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자의 실직 전 최근 직장에서 수령하던 임금액을 비교해 보면, 단기실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던 실업자(61.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장기실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던 실업자의 비율(50.1%)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단기실업자의 평균 임금액(96.42만원)은 장기실업자의 임금액(105.64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실업자가 가지는 장년층화 된 연령 구조나 근속년수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연공서열체제라는 우리 나라의 임금체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장기실업자가 종사했던 최근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의 비율(32.4%)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장기실업자가 가지는 저숙련의 특성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장기실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고연령, 고학력, 저숙련이라는 서구 유럽국가의 장기실업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장기실업자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장·단기실업자의 고용관련 변수를 비교한 것으로,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실업자가 실직 전 종사하던 업종은 건설·전기업(28.1%)이 가장 많고, 공공업(26.4), 제조업(21.0), 서비스업(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실업자의 58.3%는 실직 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71.2%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장기실업자의 실직 사유는 일감부족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과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도 각각 24.1%와 16.4%로 나타나, 구조적인 이유가 전체 실직사유의 72.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7.2개월로 단기실업자의 47.1개월보다 20개월 이상 길다. 이는 장기실업자가 가지는 고연령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이나 고용관련대책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 장기실업자의 75.7%이며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91.2%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실업자나 단기실업자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이며, 정부의 사회안전망의 혜택이 장기실업자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장기실업자(70.7%)들이 단기실업자(51.5%)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lt;표 4&gt; 장·단기실업자의 고용관련 특성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최근업종 ***	1차산업	0	0.0	6	0.7	6	0.5
	제조업	41	15.8	181	21.0	222	19.8
	건설·전기업	43	16.5	242	28.1	285	25.4
	서비스업	69	26.5	149	17.3	218	19.4
	금융·보험업	20	7.7	56	6.5	76	6.8
	기타 공공업	87	33.5	227	26.4	314	28.0
근무형태 ***	정규직	139	53.7	501	58.3	640	57.2
	임시직	57	22.0	108	12.6	165	14.7
	일용직	31	12.0	176	20.5	207	18.5
	자영업	32	12.4	75	8.7	107	9.6
직장규모	5인 미만	79	31.0	218	25.9	297	27.1
	5인-9인	44	17.3	199	23.7	243	22.2
	10인-29인	57	22.4	182	21.6	239	21.8
	30인-100인	41	16.1	127	15.1	168	15.3
	100인 이상	34	13.3	115	13.7	149	13.6
평균근속연수***		47.1		67.2		57.15	
실직사유	파산·폐업	51	19.5	205	24.1	256	23.0
	정리해고	34	13.0	140	16.4	174	15.6
	일감부족	85	32.6	273	32.0	358	32.2
	개인사유	60	23.0	165	19.4	225	20.2
	기타(퇴직 등)	31	11.9	69	8.1	100	9.0
고용보험	가입	43	18.9	111	14.3	154	15.3
	미가입	155	68.0	588	75.7	743	73.8
	모르겠다	30	13.2	78	10.0	108	10.7
공공근로 ***	경험	134	51.5	602	70.7	736	66.2
	미경험	126	48.5	250	29.3	376	33.8
직업훈련	경험	32	12.5	74	8.8	106	9.7
	미경험	225	87.5	766	91.2	991	90.3
퇴직금 **	수령	42	16.9	202	24.8	244	23.0
	미수령	206	83.1	613	75.2	819	77.0

t-test, chi-square: \*\*\* p &lt; 0.001, \*\* p &lt; 0.01

참여하고 있으며, 단기실업자(1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장기실업자들(24.8%)이 실직사 기업의 법정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의 생활관련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표 5>와 같다. 실업자들은 장·단기 구분 없이 대체로 소득의 감소와 함께 소비수준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81.6%). 소비수준의 감소액은 평균 38.12만원이며, 장기실업자의 감소액(40.98만원)이 단기실업자(35.25만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중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전체의 75.2%에 달하며, 이는 단기실업자(59.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5> 장·단기실업자의 생활관련 특성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합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소비수준	증가	5	1.9	35	4.1	40	3.6
	변화없음	37	14.3	111	13.1	148	13.4
	감소	210	81.1	693	81.7	903	81.6
	모름	7	2.7	9	1.1	16	1.4
소비수준 평균	감소액**	35.25		40.98		38.12	
생계곤란***	전혀그렇지않다	4	1.7	18	2.2	22	2.1
	그렇지않다	35	15.0	73	8.9	108	10.3
	그저그렇다	55	23.5	111	13.6	166	15.8
	그런편이다	83	35.5	303	37.0	386	36.7
	매우그렇다	57	24.4	314	38.2	371	35.2
전보다 못한 직장에 대한 수용정도***	매우수용못함	5	2.0	14	1.7	19	1.8
	수용못함	39	15.5	85	10.2	124	11.4
	그저그렇다	55	21.8	101	12.1	156	14.4
	수용함	133	52.8	553	66.5	686	63.3
	매우수용함	20	7.9	79	9.5	99	9.1
기대입금		89.02		87.50		88.26	
재취업에 대한 확신***	매우확신못함	8	3.2	67	8.0	75	6.9
	확신못함	44	17.4	218	26.0	262	24.0
	그저그렇다	83	32.8	298	35.5	381	34.9
	확신함	99	39.1	225	26.8	324	29.7
	매우확신함	19	7.5	31	3.7	50	4.6
실업대책 개선방안	현금지원	32	12.2	94	11.0	126	11.3
	일자리창출	206	78.6	703	82.3	909	81.5
	직업훈련	24	9.2	57	6.7	81	7.3

chi-square \*\*\* p < 0.001

한편, 장기실업자 중 이전 직장보다 못한 대우의 직장을 제의 받을 경우 수용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76.5%에 이르며, 평균 기대임금에 대한 수준(87.5만원)도 단기실업자(89.02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실업자들이 재취업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실업자 중 재취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0.5%에 불과하며, 장기실업자들은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현금지원(11.0%)이나 직업훈련의 확대(6.7%)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82.3%)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장기실업자의 대부분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기대수준을 낮추어 가며 재취업하길 원하지만,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율은 15.9%에 불과하며, 재취업에 대한 확신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장기실업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현황과 요인에 대한 분석

##### 1. 장기실업자의 실직생존도와 재취업위험도 분석

<표 6>는 장기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추이에 대한 생존도와 재취업위험도를 life-table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장기실업자의 최장 실직기간은 22개월이고,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직상태로

<표 6>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추이 life table 분석

기 간		재취업자	censored	표본수	재취업위험도	누적생존율
0	12	0	0	1029.0	0.0000	1.0000
12	13	36	77	990.5	0.0036	1.0000
13	14	8	25	903.5	0.0085	0.9637
14	15	15	39	863.5	0.0174	0.9551
15	16	12	74	792.0	0.0152	0.9385
16	17	14	54	716.0	0.0196	0.9243
17	18	23	62	644.0	0.0357	0.9062
18	19	17	104	538.0	0.0316	0.8739
19	20	80	51	443.5	0.0180	0.8463
20	21	20	213	303.5	0.0659	0.8310
21	22	11	162	96.0	0.1042	0.7762

남아 있는 실업자의 비율은 전체의 77.62%이다.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의 가능성(위험도)은 실직이후 21개월에서 22개월까지의 기간(0.1042)에 가장 높으며, 17개월에서 18개월(0.0357)과 18개월에서 19개월(0.0316)의 기간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위험도는 실직기간이 늘어날수록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Weibull 모델 분석

IMF 이후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 발생 위험도는  $\sigma=0.175$ 인 Weibull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는 재취업 위험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life-table 분석의 결과를 다시 입증하는 것이다. Weibull 모델의 분석결과 장기실업자의 실업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최근직장의 규모, 근무형태, 이직사유, 공공근로참여여부, 의중임금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장기실업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분석의 결과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길어짐을 보여준다. 이는 노령실업자일수록 재취업의 확률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주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비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가족수가 많은 장기실업자일수록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실업자가 가지는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감이 재취업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실업자의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최근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결과를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류태균, 1999; 강철희, 김교성, 2000)들과 종합해 볼 때, 우리 나라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의 변수이고 성이나 교육수준의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변수는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연구의 연구결과에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의 실업상황이 '단기간 대량실업'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의 대량실업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수행되는 가운데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취업과정에서 개인의 인적자본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구조적 과정에서 양산된 실업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사무직 중심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변수가 인적자본가치로서 기능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류만희, 1999).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이전 직종별로 혹은 이전 업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업종별로 건설과 전기업에 종사했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

간이 공공업에 종사했던 실업자의 실업기간보다 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이전 직장의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직장규모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실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 규모(5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장기실업자들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실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재취업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호체계를 가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들 집단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형태에 따른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자영업에 종사하던 장기실업자가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에 종사하던 실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자영업에 대한 재취업까지의 상대적 기대실업기간은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이직사유별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파산이나 폐업, 정리해고, 일감부족, 그리고 퇴직 등과 같은 기타 사유로 이직한 장기실업자의 실업기간이 개인적인 사유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IMF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이 개인적인 사유로 실직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장기실업자의 기대실업기간에 대한 실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가입여부, 직업훈련 경험여부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여부 변수는 유의미한 변수이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참여하지 않은 실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실업자의 생활의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들의 재취업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근로동기 하락효과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직업훈련사업과 같은 실업대책은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기실업자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거니와, 정부가 IMF 이후 고용보험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정 퇴직금 수령여부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실업자의 경우, 의중임금 액수가 커질수록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IMF 이후 장기실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저임금 일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요인: Weibull Model 분석

변 수		계 수		SE
성별	(여성)	0.0564		0.0446
연령		0.0067	***	0.0020
교육년수		0.0097		0.0063
가주주여부	(가주주아님)	-0.1279	**	0.0548
가족수		-0.0596	***	0.0151
최근소득		0.0002		0.0003
최근근속년수		0.0001		0.0001
최근직종	(기타)			
	전문관리직	0.0719		0.0965
	사무직	-0.0027		0.0963
	서비스직	0.1262		0.0653
	기계·조립직	0.0035		0.0593
	단순노무직	-0.0288		0.0760
최근업종	(공공업)			
	1차산업	3.6552		10856
	제조업	-0.0323		0.0549
	건설·전기업	0.1262	*	0.0653
	서비스업	0.0003		0.0593
	금융·보험업	-0.0288		0.0760
최근직장규모	(100인 이상)			
	1인~4인	0.1655	**	0.0848
	5인~9인	-0.0597	*	0.0675
	10인~29인	-0.0785		0.0641
	30인~100인	0.0486		0.0706
최근근무형태	(자영업)		*	
	정규직	0.2177	**	0.0816
	임시직	0.2719	**	0.0993
	일용직	0.2320	**	0.0946
이직사유	(개인사유)			
	파산·폐업	-0.0640	***	0.0703
	정리해고	-0.0783		0.0695
	일감부족	-0.1683	**	0.0688
	퇴직 등	-0.2561	***	0.0758
고용보험가입여부	(모름)			
	가입	-0.0454		0.0854
	미가입	-0.0863		0.0745



&lt;표 7&gt;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요인: Weibull Model 분석 (계속)

변 수		계 수		SE
공공근로참여여부	(미참여)	0.1055	**	0.0385
직업훈련경험여부	(경험없음)	0.0509		0.0637
퇴직금수령여부	(미수령)	-0.0928		0.0475
의중임금		-0.0001	***	0.0003
상수		1.1457	***	0.2111
$\sigma$ (scale)		0.1755		0.0136
log-likelihood for Weibull		-179.8511		
log-likelihood for Log normal		-183.2651		
log-likelihood for Exponential		-308.3556		

\*\*\* p &lt; 0.001, \*\* p &lt; 0.01, \* p &lt; 0.05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 연구결과의 요약

IMF 경제 위기 이후 서울특별시의 장기실업자들은 고연령, 고학력, 저숙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실직사유를 보면, 일감부족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과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도 각각 24.1%와 16.4%로 나타나, 구조적인 이유가 전체 실직사유의 72.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들의 대부분은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실업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장기실업자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 가며 재취업하기를 원하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실업정책과 관련한 최우선 정책으로 원하고 있지만, 재취업율은 15.9%에 불과하며, 재취업에 대한 확신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실업자에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고연령의 장기실업자들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전기업에 종사했던 장기실업자들과 개인적 사유가 아닌 기업의 구조적인 이유(정리해고, 파산·폐업, 일감부족)로 실직한 장기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및 고용정책의 효과를 보면, 정부의 단기간 확대된 고용보험사업이나 직업훈련사업 등과 같은 생활안정정책이나 고용촉진 정책들에 대한 노력은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정책적 방안 : 긍정적 차별정책의 강화

1980년대부터 장기실업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국가에서 정책방안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고용창출정책, 고용보조금 지급, 긍정적 차별정책,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기실업자의 기간의존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장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장기실직자고용촉진 장려금'으로서 장기실업자를 민간기업체에서 채용할 경우 임금 1/3(대기업 1/4)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고용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실업자의 기술수준의 균형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간동안만 실업이탈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보조금 지급과 직업훈련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기술수준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긍정적 차별정책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실업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장기실업자가 단기실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차별정책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장기실업자의 기술균형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반생산적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채용과정에서 실업자의 보유 기술수준을 검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므로 오히려 장기실업자들의 경우 자신의 보유 기술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체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사업과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되어 왔다(류만희, 1999). 결국, 공공근로사업이 보다 생산적인 긍정적 차별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전문화, 다각화하여 장기실업자의 기술수준의 균형을 개선시키고, 이와 함께 관련정책과 연계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긍정적 차별정책의 강화와 관련하여 영세사업장 종사경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이전 직장의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직장규모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실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경우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출신 장기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자에 대한 profiling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영세사업장 출신 장기실업자를 위해 긍정적 차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Ben Lockwood.(1991), Information Externalities in the Labour Market and Duration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733~753.
- Blanchard, O. J. and Diamond, P.(1994), Ranking unemployment duration and wag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 417~35.
- Daron Acemoglu(1995), Public Policy in a Model of Long-term Unemployment, *Economica*, 62, 161~78.
- Higgins, B.(1994), Reducing Unemployment: Current Issue and Policy Options, A symposium sponsor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OECD(1996), Family, Market and Community; Equality and Efficiency in Social Policy, social policy studies No.21.
- Robert Havema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Are They Compatible?에서 재인용.
- Pissaridse, C.(1992), Loss of skill during unemployment and the persistence of unemployment shock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1371~92.
- Richard Jackman & Richard Layard.(1990), Does Long-term Unemployment Reduce a Person's Chance of a Job? A Time-series Test, *Economica*, 58, 93~106.
- Robert Haveman.(1998),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Are They Compatible? OECD, *Family, Market and Community; Equality and Efficiency in Social Policy*, social policy studies No.21.
- OECD(1998), *Employment Outlook*.
- 강철희 · 김교성 · 김진욱.(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37권, 1~33.
- 강철희 · 김교성.(2000),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39권, 5~40.
- 김대일.(1999), "실업장기화의 효과분석", 배무기 ·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 쟁점과 전망」, 경문사, 33~61.
- 노동부 외.(2000), 2000년 종합실업대책.
- 류만희.(1999), 실업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류태균.(1999), IMF 이후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39권, 210~37.

신동균.(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